

野 “여당이 폭동 선동해”... 與 “영장 형평성 지켜야”

국회 ‘서부지법 난입’ 현안질의 민주 “윤석현, 폭력사태 부추겨” 국힘 “15자가 영장 발부 사유” 법무 대행 “국헌문란 측면 있어”

여야는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전남 윤석현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와 직후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서 벌인 폭력사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게 발부된 구속영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지적하는 반면 민주당 등 야권은 당시 집회에 참석한 윤석현 국민의힘 의원 등이 폭력사태를 부추겼다고 공세를 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전대업법원행정처장과의 질의에서 “어제(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사유가 기억나나”라며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 15자가 구속영장 발부 사유다”라고 밝혔다.

송 의원은 “반면에 이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할 땐 어땠나. 최대 600자로 이걸 기각한 적이 있지 않나”라며 “누구에게 불구속 수사 원칙을 강조하고 공적 감시, 비판의 대상인 점을 고려해서 구속을 안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공적 감시의 대상이 아닌가”라고 물었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1회 국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 서부지법 불법 폭력점거 시위사태 관련 긴급 현안 질의에서 모니터에 관련 사진자료를 보여주고 있다. 뉴시스

다. 같은 당 박준태 의원의 “국민적 관심이 높고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며 “수사는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다. (구속 영장 발부는)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을 때 이뤄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무죄추정 원칙이 있기 때문에 범죄의 중대성만으로도 영장이 발부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

두환도 법원엔 안 들어갔다. 윤석현은 국회에 충기를 갖고오고 실탄을 장전해 갖고 왔다”라며 “국회의원들을 4인1조로 하나씩 끌어내라고 했다. 그런데 이게 내란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법원 난입을) 선동한 자가 있다. 윤 의원이 (월담한 인원들에게) ‘곧 훈방 조치 될 거다’ (라고 말했다.) 그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나”라고 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서 17명 월담 인원들을 폭동의 시

작이라고 보는데, 윤석현 국민의힘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관계자와 이야기했고 곧 훈방할 것’이라는 발언을 했다”라며 “폭동을 일으켜도 ‘국민의힘에서 도와주 나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장 의원은 “(여당은) 제대로 된 상황 인식도 못하고 있다”라며 “권성동 원내대표가 ‘폭력사태의 책임은 경찰에도 있다’ (라고 말했는데) 있을 수 있는 발언인가”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석우 법무부장관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불법으로 침입해 난동을 피운 것과 관련해 “불법 폭력점거 시위”라고 규정했다.

김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정청래 법사위원장으로 부터 “서부지법 (사태는) 폭동이라고 할 수 있지 않느냐”란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정 위원장은 김 권한대행에게 “(불법 폭력점거 시위) 그것을 두 자로 줄이면 폭동이다”라며 이번 사태가 국헌문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물었다. 현행법상 내란죄는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 또는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정의돼 있다.

김 권한대행은 이에 대해 “그런 측면이 있다”고 답했다.

그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범죄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대업법원행정처장도 ‘서부지법 사태가 내란죄에 해당하는 측면이 있느냐’는 질의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담하고 분노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이 ‘저런 상황에서 재판할 수 있느냐’고 질의했고, 전 법원행정처장은 “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어 정 위원장이 “철저하게 수사해달라. 선전선동한 자들도 다 찾아내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김 권한대행은 “알겠다”고 답변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민주 인권위 출범... “윤 정부, 집권 내내 인권 훼손”

인권위 정상화·관련 법 제도 개선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상화와 관련 법 제도 개선 등에 나서는 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회가 20일 출범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 인권위 출범식에 참석해 “윤석현 정부는 집권 내내 인권의 가치를 훼손하고, 보호받아야 할 이들을 철저히 소외시키는 것은 물론 차별과 혐오를 선동했다”며 “그 결과 불필요한 갈등과 혼란으로 국론이 분열됐다”고 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그래서 민주당 인권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다”며 “대한민국 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모두가 차별받지 않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데 힘써달라”고 언

급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인권위원장을 맡은 고민정 의원을 비롯해 박홍배·서미화·최기상 민주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고 의원은 “현재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위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 안에서조차 인권 유린과 인권 탄압이 자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많은 인권 단체와 연대하며 시민과 함께하는 제2의 인권위원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민주당 인권위는 향후 ‘국가인권위 후퇴 견제 및 정상화 노력’, ‘인권 현안 관련 입장 표명 및 토론회 등 개최’, ‘국민 인권 보호 및 신장을 위한 현장 활동’, ‘관련 법 제도 개선 활동’ 등에 나설 계획이다.

서울=김선욱 기자

조국혁신당 “폭도 두둔한 국민의힘, 정당 해산이 답”

조국혁신당은 20일 윤석현 대통령 지지자 등의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에 대한 국민의힘 책임론을 제기하며 “정당 해산이 답”이라고 했다.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현 정권 치하에서 상상도 못 할 일들이 벌어졌다.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입법부를 침탈하더니 폭도들이 사법부에 난입했다”며 “여러 독재 정권에 걸쳐 벌어진 사건이 두어 달 만에 일어났다”고 했다.

그는 “서울 서부지법에서 일어난 난동은 역사 속의 폭도가 하던 짓”이라며 “서부지법 앞 폭도들은 행인을 붙잡고 ‘중국어 인이나’고 묻고, 한국말을 해보라고 했다. 또 유리창을 깨고 침입한 뒤 기물을 닦는 대로 파괴하고 윤석현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으려고 법원을 뒤졌다”고 말했다.

김 대행은 “그런데 윤석현과 내란 추종 세력의 행태가 가관”이라며 “윤석현은 ‘억울하고 분노하는 국민이 평화롭지 않은 방법으로 의사를 표출한 것’이라는 식으로 폭도를 두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 권역세 비대위원장도 ‘불법 폭력 행위는 대통령을 위하는 일도 아니다’라고 하면서 오늘 아침에는 마녀사냥이 아니라 진상을 규명하라며 폭도에 대한 비판을 폄하했다”고 밝혔다.

김 대행은 “(국민의힘은) 위헌 정당의 면모를 끌고루 갔었다. 결국 해산이 답”이라며 “우리는 앞으로 내란 세력을 마지막 명까지 찾아내 끝까지 단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이재명 “시중 은행, 소상공인·자영업자 충실한 지원을”

6대 은행장들과 현장 간담회 “서민금융 지원 더 애써 달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시중 은행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특히 어려운 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준비하신 여러 가지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방안들도 있는데 충실히 잘 이행해달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진행된 은행권 현장 간담회에서 “전 세계적인 상황도 그렇고, 대한민국의 특수 상황까지 겹쳐 대한민국 경제가 매우 불안정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상황이 어려울수록 힘없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고통을 겪는 게 현실”이라며 “각 은행, 금융기관들도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서민 금융 지원을 위해 애를 많이 쓰시는 것으로 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때일수록 도움이 절실할 텐데 원래 금융기관 역할 자체가 기본적으로 지원 업무 아니겠나, 그 기본적인 역할을 잘해주고 계셔서 감사드린다”며 “우리 서민들 또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시길 부

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다만 이 대표는 “오늘은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강요해서 무엇을 얻거나, 아니면 무언가를 강제하기 위한 게 전혀 아니다”라며 “정치권이 어떤 도움 줄 수 있는지 물어보려는 자리”라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신한·우리·하나·IBK 기업·KB국민·NH농협 등 6대 시중 은행장들과 조용병 전국은행연합회장 등이 참석했다. 민주당에서는 강준현 의원을 비롯해 국회 정무위 소속 의원들도 함께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우 의장 “민생경제 회복 정책 지원·추경 편성 필요”

광주·전남 여행사 대표들과 면담

우원식 국회의장은 20일 국회 의장직무실에서 광주·전남 관광협회 선석현 회장 등 광주·전남 여행사 대표들을 만나 지역 관광산업 위기상황에 대해 긴급간담회를 가졌다.

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비상계엄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안그래도 어려운 상황에 여객기 참사까지 더해지면서 지역 관광업에 큰 위기가 찾아왔다”며 “여행사들의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여행업계 종사자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어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정부의 역할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하다”며 “영세한 여행사들이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호소하고 있으니, 정부는 관광업계가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면밀히 파악하고 위기 극복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20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광주·전남 관광산업 위기상황 긴급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 뉴시스

우 의장은 이어 “민생경제를 살리는 일에 다른 목소리가 있을 수 없다”며 “2025년 예산 조기집행도 해야 하겠으나, 정말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국회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선석현 회장은 “사고 이후 광주·전남 여행업계 직원들의 트라우마가 상당하고, 관광여행이 대거 취소되면서 민생위기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며 “지역 관광업

계가 생존할 수 있도록 정책적 핀셋지원과 이후로의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간담회에는 광주관광협회 선석현 회장·강혜련 이사·양해경 이사, KBIZ한국여행사업협동조합 김재국 이사장, 국회에서 조오섭 의장비서실장, 이원정 정책수석비서관, 박태서 공보수석비서관 등이 함께 했다.

서울=김선욱 기자